광주 북구청사 신축 현 부지 '가닥'

일부 철거 업무동 신축, 선관위·보건소 자리에 별관 등··· '1500억~2000억 소요' 새 부지안 제외

빨간색 벽돌건물로 북구의 랜드마크로 활용되던 광주시 북구청사가 제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북구는 한때 청사 내 공간이 없어 맞은편 상가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횡단보도를 건너 결재 를 받으러 오가는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청 사 이전 신축을 고려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 부지를 활용해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 청사 옆에 붙어 있는 북구 선거관리사무소가 오는 12월 말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이 공간에 별관을 신축해 과밀을 해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구는 지난 26일 북구의회에 '청사 확충 기본 구상 연구 용역'결과를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85년 지어진 북구청사는 그동안 늘어난 행정인력과 노후된 시설 탓에 이전 요구가 많았

주차장에서 본관까지 직선거리만 300m로 부지 사용이 비효율적이고 본관과 별관 외에 보건 및 교 통 민원은 청사 맞은편 건물에서 처리해 직원과 민 원인의 불만이 높았다.

민원인들은 외부 동선 뿐 아니라 내부 동선도 복 잡해 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고충을 토

업무 연계성이 높은 부서가 떨어져 있어 효율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문화국 에 소속된 일자리정책과는 1층에 있고 같은 국에 속한 민생경제과는 4층에 있는 식이다.

결국 북구는 지난 1월 현재 부지활용과 이전 중 어느 방안이 좋은 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26일 용역 중간결과를 받았다.

용역결과 북구는 현 부지 내 일부 건물을 철거하 고 업무동을 신축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 침을 제시했다. 청사를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안 은 최소 사업비만 1500~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돼 제외했다.

청사 신축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 선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과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업비는 350억 원을 들여 신 관(지하1층~지상 6층)을 건축한다.

신관에는 안전생활국, 경제문화국, 도시관리국 산하 15개 부서 직원 323명이 근무하게 된다. 흩어 져 있던 부서들을 한 건물에 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 인다는 것이다.

2단계에선 현재 본관 3,4층을 사용 중인 북구의

회 의회동 건물의 신축 이전을 검토한다. 청사 부지 내에 짓는 신축 의회동 건립에는 112억원의 사업비 가 소요될 전망이다.

3단계에선 본관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 여부를 결 정한다.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 고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내진보강 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관을 신축할 경우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할 경우 본관 신축보다 약 50억 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리모델링의 경우 북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 지만 내진 설계와 구조보강을 해야 하는 만큼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다.

주차장 확보 계획도 포함됐다. 직원 차량 이용현 황 조사 결과 최대 596면의 주차면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나 위치와 규모 등을 검토해 주차장을 증축 하거나 신축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결 론을 낼 수 없지만 청사 이전보다는 현재 자리에 신 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오래된 인쇄 기계와 활자 등을 전시하

는 '활자, 다시 피어나다'전이 27일

광주시 동구 서남동 인쇄거리 내 인쇄

컬렉션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22년 서남동 도시재생뉴딜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오 는 12월까지 열린다. 관람객들이 활 자와 인쇄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미기록종 '유리나방'



미기록종 '무당벌레'

신안 '新 곤충의 보고'

작은호랑하늘소 등 신종・국내 미기록종 곤충 5종 발견

신안지역에서 신종 및 국내 미기록 곤충 5종 이 새로 발견됐다.

신안군은 올해 생물종 조사에서 작은호랑하 늘소 신종 1종과 유리나방 등 국내 미기록종 4 종 등 총 5종의 곤충을 신규로 발견했다고 27 일 밝혔다.

호랑하늘소 신종 1종은 딱정벌레목에 속하 고 아직 정식 국명은 없다.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

벌 등지에서 매년 생물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논문 발표 등 을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며 "신안군의 생물자원을 정립 하기 위해 주요 도서 생태조사, 생물종 발굴조 사 등 생태자원 발굴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말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여교수 폭행' 전남대 교수 직위 해제

전남대는 동료 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교수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렸 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대 철학과 A교수는 지난 8일과 20일 동료 여교수에게 물건을 던지고 침을 뱉은 혐의로 광 주북부경찰에 고소됐다.

〈광주일보 9월 26일자 6면〉

전남대는 26일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해 수업 을 중단시켰다. 전남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 쳐 해당 사건이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돼 A교수 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측의 직위해제 조치와 별도로 전남대 는 27일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 홍보실 관계자는 "조사위원회가 몇 명 으로 구성되고 조사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7일 보도자 료를 내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센터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2차 가해의 책임이 있는 전남대 측에서 비공개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 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투명한 결과를 위해 조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체험학습 왜 안 보내줘" 흉기 휘두른 중학생

교내 일탈 행위로 참여 제한…충동과잉 행동 약 복용 이력도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중학교 에서 흉기로 또래 학생들을 위협한 3학년생 A (16)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



전 8시 15분께 학교 보 건실에서 흉기 2개를 들고 또래 학생 2명에 게 휘둘렀다. 이 과정 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 "기대

했던 체험학습을 못 가게 하니 화가 나서 그랬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는 A군이 집 에서 미리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다음 달 중 체험학습을 떠 날 예정이다. 다만 A군은 이달 초 교내 일탈 행 위로 특별교육 처분을 받아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충동적인 과잉 행동으로 오랜 기간 약 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나 최근 수개월 동안은 약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교원감축 반발' 전교조 전남지부 농성 돌입

책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혁신학교 폐지정책 등 에 반발하며 27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

전교조는 "70년 역사에서 적어도 교원 정원은 한 번도 감축한 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교원 정 원을 감축했다"면서 "교육을 망치려하지 않고서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수업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단위로

전교조 전남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정 이뤄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공무 원 정원감축을 이유로 학생 수 기준 교원 정원 배정 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남의 상당수 학교인 농산어 촌과 원도심의 작은학교들을 말라죽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민들의 인구 유출을 부추겨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3 학년도 교원정원 2차 가배정 인원을 통보했다.

전남은 올해 대비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279

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전남교육청의 초등학교 신 설에 따른 초등 교원 50여명, 고등학교 학급수 증 가로 인한 중등교원 20여명 증원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초등교원은 100여명, 중등교원은 300여명 이 줄어든 셈이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지속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몇몇 의 주관적인 평가와 주장으로 인해 12년 동안 추진 해온 진보교육 대표정책인 혁신학교를 없애려 한 다"고 반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